# 전남대병원 본·분원에 군의관·공보의 16명 파견 배치

●전공의 집단사직 4주차

## 내일부터 진료…"성형외과·일반의 많아 큰 도움 안될 듯"

## 전남서 23명 차출·7명 광주로…해당 지역 주민 불편 예상

전공의 집단사직이 4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11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한 지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립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파견배치했다.

그러나 파견 군의관과 공보의 상당수가 이미 병원이 진료·수술을 대폭 축소한 진료과의 인력들이어서 현재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병원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11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광주·전남 거점 국립대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 본·분원에 총 16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투입됐다. 이들은 이날 출근했지만, 병원 내부 교육 등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진료에 나설 예정이다.

조선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이 아니어서 의사 파견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대병원에는 공보의 7명·군의관 1명이 배치됐다. 파견 의사들의 진료과는 성형외과 4명, 소아청소년과·영상의학과·신경외과·마취통증과 1명씩이다.

화순전남대병원에도 공보의 7명·군의관 1명이 파견됐는데, 소아청소년과·마취통증의학과·내과 등 3명만 전문의이고 나머지 5명은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공중보건의)이다.

이 때문에 의사 인력 지원의 의미는 있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의료과 인력은 소수에 그쳐 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계다가 이 중 7명은 의료 취약지인 전남에서 차출된 공중보건의로, '또 다른 의료 공백'으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전남에 근무하는 공보의 267명(의학 분야) 중 22명(8.2%)을 서울 신촌세브란스 7명, 서울 아산병원 7명, 화순전남대병원 6명, 전남대병원 1명, 충북대병원 1명 등 5곳의 일선 의료기관에 보냈다. 파견 기한은 오는 4월11일까지다.

파견 공보의는 보건소 공보의 4명, 보건지소 공보의 19명이며 전문의 3명, 일반의 19명이다. 전문의는 모두 소아청소년과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전남 공보의 1명이 4주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긴급의료상황실로 파견된 바 있어 현재 전남도에서 파견된 공보의는 총 23명에 이른다.

통상 보건소에는 2-3명, 보건지소에는 1명의 공보의가 근무한다. 이들 공보의가 한 달가량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비우면 해당 보건기관을 이용해왔던 주민들의 진료 불편이 불가피하다.

전남도는 의료취약지인 점을 들어 공보의들이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전남도는 남아있는 보건기관에서 순회 진료를 하거나 원격 진료를 검토하는 등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전남대병원 전공의 156명은 지난달 19일 사직서 제출 이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으며 이달 신규 임용 예정이었던 전남대병원 전임의 중 21명도 계약을 포기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화순전남대병원도 전공의 68명 중 65명이 병원을 이탈,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각 병원은 환자 병상 가동률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수술도 최소화하는 등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오는 13일부터 파견 의사들이 진료현장에 투입된다. 다만 공보의 등의 숫자가 적고 전공 과가 달라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수희·양시원 기자

# 정부, 전공의 4천944명 처분통지…"절차 마무리 전 복귀땐 선처"

### 내주 공보의 등 추가 파견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에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천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약 5천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했다.

12일부터는 복귀했거나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를 돕고자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이날 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난 8일까지 4천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사전 통지 이후 전공의들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천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입장이다.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복지부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하고, 사후에 불이익을 받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정부는 응급진찰료 수가(酬價)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지원 등을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1천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행한다. 향후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당직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도 신속히 집행한다. /연합뉴스

# 여수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18명 전원 구조

여수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좌초돼 다수의 승선원이 다쳤으나 모두 구조됐다.

11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8분께 여수시 삼산면 소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9.7t급 낚시어선이 좌초됐다.

승객의 침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소방 당국 등은 선원과 승객 등 18명을 모두 구조했다. 다만, 선장 A(47)씨와 선원 B(42)씨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다른 탑승객 6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재영 기자

### 전동킥보드 함께 탄 10대들 교통사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던 10대 여학생 2명이 차량과 충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1일 광주 광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47분께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A(15)양과 B(13)양이 동승한 전동킥보드가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양과 B양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면허 취득 나이가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같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의 사항을 어길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을 받게 된다. /이옥근 기자

### '사고 후 미조치' 피해자 사망케 한 50대 실형

운전 중 자전거와 충돌했으나 사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5일 오후 7시15분께 담양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피해자는 A씨의 차에 치이고 나서 1-3분 뒤 도로를 지나던 후속 차량 2대에 잇따라 깔려 결국 숨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재영 기자

### '현역병 피하려고' 고의로 체중 감량 20대 집유

현역병으로 군 복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물까지 마시지 않는 등 고의로 살을 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뒤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식사량과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 체중을 줄여 2021-2022년 두 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50㎏ 안팎의 체중을 유지,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학에서 제적되고 3수 도전에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해 체중이 감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재영 기자